기업·대학 등에 '1200억 규모'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본격화

산업부, 신규사업 과제 수요 접수
신규예산 70%, 40대 프로젝트 투입
10%, 실패 감수 등 도전적 연구 투자

정부가 올해 1200억원 규모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부터 기업,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신규사업과 과제 수요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접수 대상은 민간이 도전할 의지는 있으나 실패 위험이 커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로, 성공 시 산업난제를 해결하거나 세계 최고·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서 신규 예산의 70% 이상을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40대 프로젝트를 우선 투입하고, 10% 이상(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고, 실패 가능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성과가 큰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수요 접수도 산업부가 직접 챙긴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수요 접수 외에 산업부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주요 기업 등과 소통하며 실패 위험이 커 그 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또 한국공학한림원 내 기술별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국내 최고 석학들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수요 조사 결과는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선별하고, 수요제출 연구자 등이 참여해 세부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올해 즉시 지원 가능한 과제는 4월로 예정된 2차 공고, 7월 예정인 3차 공고에 반영한다. 또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내년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오승철 산업기술반실장은 "우리 산업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자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무협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추대

한국무역협회는 7일 서울 삼성동 소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구자열 무협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회장(사진),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 등 무협 회장단과 이사상사 대표, 스타트업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한일 교류 특별위원장에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추대됐다.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는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민간 경제 협력과 산업 교류를 선도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향후 한일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무협의 일본 관련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일본 경제동우회 산하 '일한 교류 위원회'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해 한일 기업 간 교류 플랫폼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은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와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함께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라며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가 양국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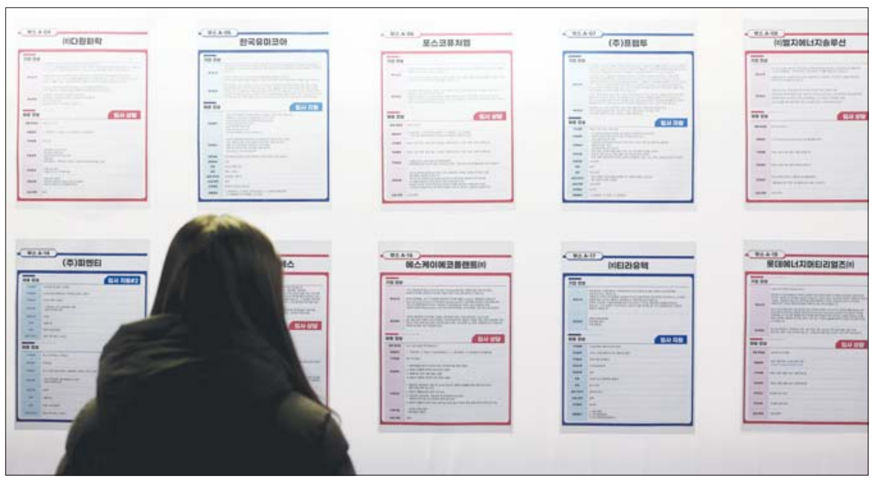
무협은 오는 3월 양국 기업인 간 경제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한일 신산업 무역 회의'를 도쿄에서 주최할 예정이며,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연중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기업의 일본 내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마케팅 행사인 '2024 도쿄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은 5월 도쿄에서 열린다. 6월 개최되는 '넥스트 라이즈 2024'에서는 일본을 주빈국으로 초청해 양국 스타트업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세종=한용수 기자

청년 8만명, 공공기관 인턴 등 '일 경험' 제공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해외일경험 추진 성과·계획 논의
일경험 지원센터 6개소 신규 개설



24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이차전지 특화 기업 취업 매칭데이'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참여 기업 소개 안내문을 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 청년 8만명 이상에게 공공기관 인턴 등 일경험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경험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 해외일경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우선 작년 2000명 규모로 신규 도입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참여 인원을 5000명으로 늘리고, 단기형(2~3개월)을 신설해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공공기관 인턴은 올해 총 2만2000명 채용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청년인턴의 정규직 연계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일경험 기회도 5300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지난해 청년과 기업 만족도가 컸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 4만8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과 대전, 대구 등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6개소를 신규 개설해 지역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 소재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체류비 일부(1주당 5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진로 탐색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현장의 생생한 일경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양질의 일경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63개 시·군·구 농촌빈집 실태조사 실시

농식품부, 국비·지방비 등 50억 투입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농촌 빈집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함께 국비 및 지방비 총 50억 원을 투입해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활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을 따른다.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등급 뿐 만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월말 기준 총 14개 시·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이번 빈집 실태조사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들 지역부터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 중 하나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을 통해 조사가 실시된다. 실태조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별로 진행된다. 조사가 완료되는 지자체의 빈집 현황부터 전국단위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e)'(http://binzib.reb.or.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는다.

또 하도급분야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법위반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감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탄강 등 지방하천 20개 '국가하천' 승격

지방하천 홍수피해 대응 강화

환경부가 8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한다고 밝혔다. 승격 대상인 20개 지방하천은 올해 10월1일과 내년 1월1일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은 10곳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 승격 예정인 10곳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추진해 왔다. 해당 지방하천 20곳은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

/세종=김연세 기자